

안보/외교

	문재인	안철수
핵	<p>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p> <p>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재개, 4자평화회담 주도적 추진 -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동결, 핵실험 유예, 핵·미사일 폐기 추진 -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지향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추진
사드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 병행 추진
방어 체계	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p>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완료</p> <p>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 국방력 확보</p>
군체계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p>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p> <p>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p>
방산비리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청령법 제정
대북 전략	<p>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p> <p>우발적 군사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p> <p>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p> <p>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p> <p>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p> <p>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p>	<p>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 남북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원칙에서 대북정책 구현 - 대북제재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통일 위한 대화와 협상 모색 - 비핵화 진전과 평화관리를 지향하는 문화, 학술, 종교, 체육교류와 인도적 지원 재개

	<p>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p> <p>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p>	
대미 전략	<p>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p> <p>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p> <p>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p> <p>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p> <p>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p>	<p>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 체제 병행 추진</p> <p>-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철저준비</p> <p>- 방위비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p>
대일 전략	<p>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p> <p>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p> <p>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p> <p>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p> <p>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p>	<p>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p> <p>-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미중일러 4강과 평화외교 추진</p> <p>- 한반도 비핵화,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외교 추진</p> <p>- 선진적 외교역량을 재정립하고, 국내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와 통상정책에 기반한 선진통상외교 추진</p>
대중 전략	<p>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p> <p>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 (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p> <p>북핵 문제 등 한반도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p> <p>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p> <p>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 우호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p>	

	속 수행	
대러 전략	<p>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p> <p>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p> <p>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p>	
동북아 전략	<p>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p> <p>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p> <p>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p> <p>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p> <p>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p> <p>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 외교 강화</p>	
군 복지	<p>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p> <p>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p> <p>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p> <p>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p>	
국가 위기 관리	<p>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p> <p>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p> <p>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p> <p>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p>	

노동

	문재인	안철수
일자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 만개 창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 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 년간 1200 만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 개월간 180 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벤처/중소기업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국가 R&D 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 를 지원 - 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및 창업지원기관 육성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구성 -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창업중소기업부) 및 민관협의체 구축 -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노동시간	1800 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 주 상한 주 52 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 개선 - 최소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여 1 일 당 11 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휴식시간 보장

		-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개편 적극 지원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 부과
최저임금	최저임금 1만원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지원대책병행마련)	
노동인권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 근로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 강력 대처 - 노동인권 및 직업윤리교육 강화
임금격차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 받는 체계 구축

정치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권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대통령의 24 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 -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 축소 - 행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예산법률주의 채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강화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축소
경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 개편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감사원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감사원(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적폐청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재벌 개혁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경영 참여금지 - 재벌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 강화, 사업연관성 있는 (증)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지주회사의 판단요건 강화
반부패 개혁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p>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p> <p>「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p>	
대학 비리	<p>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p>	
국민 통제 강화		<p>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국민공천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윤리위에 국민 참여 강화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국회		<p>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감 도입으로 일하는 국회에 의한 행정부 견제 강화</p>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균형발전 -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에서 지역 다극 발전 체제로 전환 - 기존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균형발전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는 등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 요소 제거 -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하여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극복
정치제도 개선		<p>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연령 18 세 하향 조정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재정경제

	문재인	안철수
청년	<p>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청년 NEET 포함, 18~34 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 스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 명시지급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p>	
여성	<p>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젠더폭력 근절</p>	<p>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대개혁 추진</p>
시장질서		<p>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 재벌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 - 분식회계 근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소비자집단소송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감몰아주기, 담합, 기술탈취 등 악의적인 불공정 관행 엄중 제재 -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정위 의결 절차의 투명성 제고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
--	--	--

복지

	문재인	안철수
기초연금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강화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 중장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한 고용상황평가제도 도입 · 분기별로 업종별, 직종별, 기업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 강구(고용영향평가제와 별개로 운영) - 노인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연금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정간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추진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 정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노년 건강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장기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경로당을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개편(독거 노인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장애인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건강권 보장 쉽 있는 가족돌봄사회 토대마련

교육

	문재인	안철수
공교육 비용	<p>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육아	<p>0 세부터 초등학교 6 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 12 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 세 또는 초등 2 학년까지 최장 24 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p>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 아동수당 도입
사교육	<p>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수업 2 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육아휴직	육아휴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 일 이내 3 일 유급휴가 → 유급 10 일, 무급 4 일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 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 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 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 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 배, 상한 200 만원 	
저출산	<p>아동수당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 년까지 연간 1,800 시간대로 단축 	<p>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과 국가책임 강화 -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 <성평등 육아휴직제> 및 <30 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도입
교육혁명		<p>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 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교육: 4 차 산업혁명시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 학제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 평생교육 대폭 강화
첨단기술		<p>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4 차 산업혁명 인재 10 만 명 양성 - 국가연구개발체제 전면 혁신(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업무 일원화)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규제 시스템 도입
융합기술 생태계		<p>미래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 4 차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 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 민관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 센터 설립 - 항만·항공·철도인프라 + 융합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 원전 폐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폐로산업 선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평생교육		<p>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직업훈련체계 혁신 - 퇴직 전 사전전직훈련과 상담 강화 등 전직지원서비스 체계화

농어촌, 산업자원

	문재인	안철수
영세자영업자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현금 IC 카드 활성화, 창업 전 훈련과 컨설팅 체계화 등 -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임차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농어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환경

	문재인	안철수
재난 대응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재난/재해 복구, 손해 배상 체계 개편 현장 재난/재해 대응 방식 개혁
원전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미세먼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보장
질병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화
친환경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에너지신기술과 환경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